

물부족 문제와 질적 정책



朴英洙
13대 국회의원
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전 세계는 물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난민은 '98년도에 이미 2,500만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전쟁난민의 수를 웃돌고 있다. 현재 물이 없어서 매일 죽어가는 어린이의 수만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부족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수요 증가, 각종 오폐수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가용수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물부족문제는 심각해져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반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한다. 물부족은 식량생산 감축, 경제침체,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과 직결 된다. 그로 인해 분출되는 지역간, 국가간의 물분쟁은 세계물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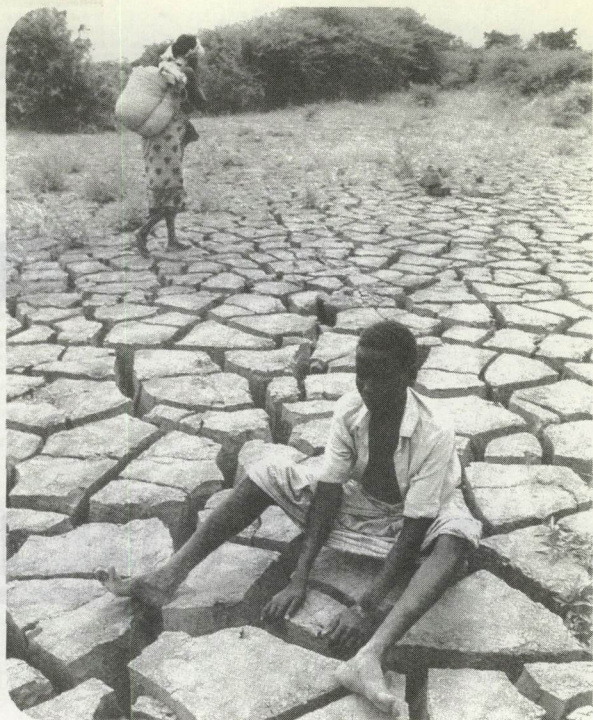
유엔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1990년에 1,470㎥로 줄어들고 2025년에 이르면 물부족(1,700㎥)도 아닌 물기근국가(1,000㎥)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 톤, 2011년부터는 20억톤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80%를 물공급과 물관리에 투입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 예산중 60%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물관리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음을 말해주

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물질약종합대책의 향후 정책을 보면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수자원관리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의 수요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서 시의적절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 시대적 요청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58억 4천만톤)의 13.5%인 7억9천만톤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절수기기 설치, 물값의 현실화, 물질약범국민운동 등 10개의 물질약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 이다. 그에 따르는 투자계획의 구체화, 적절한 기술의 뒷받침 및 범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정책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내는데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이다. 준비없는 정책집행의 결과는 사태를 보다 악화시키거나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 절수기기의 보급이다. 98년도부터 신축건물에 한해 부분적으로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04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금년에는 153억원을 들여 242만가구(2004년까지 1,100만 가구)에 절수기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환영할만한 시책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절수기기의 기술검증과 안전성검증이 걱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석연치 않다. 절수기기에 대한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인증은 불가능하며 부적정기기의 설치 절수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낭비와 예산낭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불편을 안겨줄 수가 있다. '94년도에 설치 의무화했던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가 기술 검증없이 서둘러 실시한 결과 값비싼 기기가 폐기



물이 됐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않된다.

또 하나의 우려를 짚어보자. 물부족 해결의 하나의 열쇠는 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환경부의 물질약범국민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국민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주체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주체적인 참여는 운동의 계획,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이 홍보, 교육, 실천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무슨 일을 해내기 위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를 만드는 일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이미 160여개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체내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물질약대책은 누수방지 또는 절수기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물소비양식의 변혁을 보다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이 바로 그러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약범국민운동은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000년은 예고된 물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질약범국민운동이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기를 기대해 본다. ■

새 시대를 이끌어 가는 民族正論誌

月刊 憲政

2000

통권 215 호

5

國회가 바로서야先進國된다

半世紀의 「부끄러운 舊習」을 훨훨 털어 버리고 21世紀 國會의 새로운 價値觀을 國民속에 심어 주시길...



憲政會 金尙榮會員의 長男 로버트 金

이 사람을 잊었나요

그는 「韓國」때문에 스파이의 멍에를 지고 美國에서 3年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政府는 무얼 했으며 國民은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책머리에

南北 頂上會談과 北韓의 두얼굴

21세기 특별 기획시리즈 ⑦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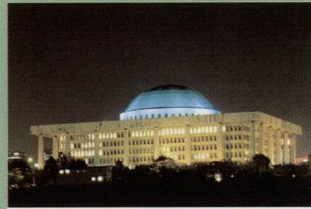
環境은 우리 生命을 좌우한다

「婦人수발」에 밤낮없는 「宋邦鏞元老」의 純愛譜

2000년 5월 / 통권 215호

月刊 憲政

題字 : 晚翠 柳致松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國會가 바로서야 先進國된다

책머리에

高在淸 · 18

南北 頂上會談과 北韓의 두얼굴
國家安保 害치는 양보는 절대 反對한다

제주 4·3사건의 진상

· 20

제주 4·3사건은 南勞黨의 무장 폭동

만 평

달갑잖은 유산

金珥喆 · 24

21세기 특별기획 시리즈 ⑦ / 환경문제

21세기 지구촌 최우선 과제는 環境

環境은 우리 生命을 좌우한다

崔 冽/ 생활속의 환경 실천... 정부·민간 역할분담으로 협력해야 ----- 26

閔萬基/ 대기오염과 자동차 공해 ----- 29

朴英淑/ 물부족 문제와 절약 정책 ----- 32

李壽珩/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 ----- 34

曹度純/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의 생태계 ----- 38

환경부장관에게 듣는다

金明子 · 42

21세기 새로운 환경정책의 방향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이 사람을 잊었나요

헌정회 金尙榮회원의 長男 로버트 金 ----- 韓相均 · 46



그는 '韓國' 때문에 스파이의 명에를 지고

미국에서 3년째 억울한 옥살이 중이다

政府는 뭘 했으며 國民은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이달의 詩

/사비성의 영광

全在球 · 51

물부족 문제와 물정책 방향

박영호 한국환경정책연구소 소장

전세계는 물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난민은 '98년 도에 이미 2500만 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전쟁난민의 수를 웃돌고 있다. 현재 물이 없어서 매일 죽어가는 어린이의 수만도 5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물부족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산성화 등 도시화로 물순환장애, 각종오염배출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가용수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이 갈수록 물부족문제는 심각해져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반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한다. 물부족은 식량생산감소, 경제침체, 그리고 생태계 파괴등에 직결된다. 그로 인해 분쟁되는 자국간, 국가간의 물분쟁은 세계물전쟁으로 이어질수로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1990년으로 우리나라 물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유엔국제인간행동연구소(PAI)의 21세기 각종 수자원 환경보고서에서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1955년에는 2.492㎥에서 1990년에는 1.470㎥로 줄어든고 2025년에 이르러서는 1.295㎥, 최저 1.100㎥로 물부족(1.1750㎥)도 아닌 물기근(1.000㎥)로 전락 할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근세기에 우리나라가 사막화 될지로 우려되는 생각이 근거 없는 공상만은 아닐것이다.

전국공공부의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20억톤이 부족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274mm)은 세계평균(973mm)의 1.31배에 이르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2,755㎥)은 세계평균(22,096㎥)의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부족 경고에 큰 불쾌한 우리나라의 1인당 물사용량은 일평균 395리터 OECD가입국중(독일 132, 프랑스 281)가장 물을 많이 쓰고 있다. 20여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물값이 싼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값은 생산원가의 50% 이하로 생활용수의 경우 48%에 불과해 물소비의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물부족상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80%를 물공급과 물관리 에 투입하고 있는데서도 알수 있다. 그 예산중 60%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음을 알해주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부도 최근 물정책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정책은 지점수 한계에 부딪친 도시권에 의한 공급위주의 수자원 관리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의 수요관리로 정책방향이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년도 예정된 동북동 문제 해소를 위한 원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동북동 광복대책이 되므로 양측을 하고 있다. 물론 양 측공민들중이
수정안까지의 새로운 해안선임을 취하게끔 기대해 본다.

물부족 문제와 물절약정책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전 세계는 물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난민은 '98년도에 이미 2,500만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전쟁난민의 수를 웃돌고 있다. 현재 물이 없어서 매일 죽어가는 어린이의 수만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부족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수요 증가, 각종 오폐수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가용수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물부족문제는 심각해져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반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한다. 물부족은 식량생산 감축, 경제침체,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과 직결된다. 그로 인해 분출되는 지역간, 국가간의 물분쟁은 세계물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1955년에는 2,492m³에서 1990년에는 1,470m³로 줄어들고 2025년에 이르면 최고 1,295m³, 최저 1,100m³로 물부족(1,700m³)도 아닌 물기근국가(1,000m³)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20억톤이 부족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80%를 물공급과 물관리에 투입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그 예산중 60%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물관리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물절약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면,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수자원관리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의 수요관리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 시대적 요청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58억 4천만톤)의 13.5%인 7억9천만톤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절수기설치, 물절약범국민운동 등 10개의 물절약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실현하는가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는 투자

이 22/11

계획의 구체화, 적절한 기술의 뒷받침 및 범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둘러내야 한다.

정책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내는데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이다. 준비없는 정책집행의 결과는 사태를 보다 악화시키거나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 절수기기의 보급이다. 98년도부터 신축건물에 한해 부분적으로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04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금년에는 153억원을 들여 대상가구의 242만가구(2004년까지 1,100만 가구)에 절수기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환영할만한 시책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절수기기의 기술검증과 안전성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석연치않다. 절수기기에 대한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인증은 불가능하며 부적정기기의 설치는 절수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낭비와 예산낭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불편을 안겨줄 수가 있다. '94년도에 설치의무화했던 음식물찌꺼기처리시설 설치가 기술검증없이 서둘러 실시한 결과 값비싼 기기가 쓰레기화됐던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의 우려를 짚어보자. 물부족해결의 하나의 열쇠는 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환경부의 물절약범국민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국민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주체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주체적인 참여는 운동의 계획,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해내는 것이다. 국민이 홍보, 교육, 실천의 대상으로 머물게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무슨 일을 해내기위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를 만드는 일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해 이미 160여개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체내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물절약대책은 누수방지 또는 절수기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물소비양식의 변혁을 보다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이 바로 그러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물절약범국민운동은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은 예고된 물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의 물부족종합대책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절약범국민운동이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기를 기대해본다.

물부족 문제와 물절약정책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전세계는 물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난민은 '98년도에 이미 2,500만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전쟁난민의 수를 웃돌고 있다. 현재 물이 없어서 매일 죽어가는 어린이의 수만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부족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수요 증가, 각종 오폐수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가용수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물부족문제는 심각해져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반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한다. 물부족은 식량생산 감축, 경제침체,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과 직결된다. 그로 인해 분출되는 지역간, 국가간의 물분쟁은 세계물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1990년에 1,470㎥로 줄어들고 2025년에 이르면 물부족(1,700㎥)도 아닌 물기근국가(1,000㎥)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20억톤이 부족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80%를 물공급과 물관리에 투입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 예산중 60%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불관리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물절약종합대책의 향후 정책을 보면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수자원관리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의 수요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서 시의적절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 시대적 요청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58억 4천만톤)의 13.5%인 7억9천만톤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절수기기 설치, 물값의 현실화, 물절약범국민 운동 등 10개의 물절약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실현하는가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는 투자계획의 구체화, 적절한 기술의 뒷받침 및 범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정책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내는데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이다. 준비없는 정책집행의 결과는 사태를 보다 악화시키거나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 절수기기의 보급이다. 98년도부터 신축건물에 한해 부분적으로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04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금년에는 153억원을 들여 242만가구(2004년까지 1,100만가구)에 절수기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환영할만한 시책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절수기기의 기술검증과 안전성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석연치않다. 절수기기에 대한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인증은 불가능하며 부적정기기의 설치는 절수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낭비와 예산낭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불편을 안겨줄 수가 있다. '94년도에 설치의무화했던 음식물찌꺼기처리시설 설치가 기술검증없이 서둘러 실시한 결과 값비싼 기기가 폐기물이 됐던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않된다.

또 하나의 우려를 짚어보자. 물부족해결의 하나의 열쇠는 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환경부의 물절약범국민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국민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주체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주체적인 참여는 운동의 계획,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해내는 것이다. 국민이 홍보, 교육, 실천의 대상으로 머물게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

무슨 일을 해내기위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를 만드는 일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해 이미 160여개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체내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물절약대책은 누수방지 또는 절수기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물소비양식의 변혁을 보다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이 바로 그러한 시안을 포함하고 있다. 물절약범국민운동은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은 예고된 물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절약범국민운동이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기를 기대해본다.

물부족 문제와 물절약정책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전세계는 물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난민은 '98년도에 이미 2,500만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전쟁난민의 수를 웃돌고 있다. 현재 물이 없어서 매일 죽어가는 어린이의 수만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부족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수요 증가, 각종 오폐수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가용수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물부족문제는 심각해져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반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한다. 물부족은 식량생산 감축, 경제침체,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과 직결된다. 그로 인해 분출되는 지역간, 국가간의 물분쟁은 세계물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1990년도에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유엔국제인간행동연구소(PAI)의 21세기 각국가 수자원 환경보고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1955년에는 2,492m³에서 1990년에는 1,470m³로 줄어들고 2025년에 이르면 최고 1,295m³, 최저 1,100m³로 물부족(1,700m³)도 아닌 물기근국가(1,000m³)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금세기에 우리나라가 사막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근거없는 공상만은 아닐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20억톤이 부족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1,274mm)는 세계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2,755m³)은 세계평균(22,096m³)의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부족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물사용량은 일평균 395ℓ로서 OECD 가입국중(독일 132, 프랑스 281)가장 물을 많이 쓰고 있다. 그 이유를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값이 싼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값은 생산원가의 70%이며 생활용수의 경우 48%에 불과해 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80%를 물공급과 물관리에 투입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그 예산중 60%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물관리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물절약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정책은 지금은 한계에 부딪친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수자원관리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의 수요관리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원칙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 시대적 요청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수도물 생산량(58억 4천만톤)의 13.5%인 7억9천만톤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10개의 물절약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기술적인 수요관리방안으로서 누수방지, 절수기기 보급, 중수로 확대 등을, 경제적 방안으로는 물값의 현실화, 물의 효율적이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일, 그리고 비경제적 대책으로는 대국민 홍보, 교육을 통한 범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책안을 하나의 문건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적정한 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범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해내야 한다.

정책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내는데 필요한 것은 기초자료들이며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시점에서 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들, 예컨대 사용자의 수요예측, 절수프로그램의 영향, 가격변화에 대한 사용자들의 민감도, 강화되는 환경규제, 공공의 선호도, 제조상의 제한, 공중의 참여도 등에 준비없는 정책집행의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 절수기기의 보급이다. 98년도부터 신축건물에 한해 부분적으로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04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금년에는 153억원을 들여 대상가구의 242만가구(2004년까지 1,100만 가구)에 절수기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환영할만한 시책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절수기기의 기술검증과 안전성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석연치않다. 절수기기에 대한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인증은 불가능하며 부적정기기의 설치는 절수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낭비와 예산낭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불편을 안겨줄 수가 있다. '94년도에 설치의무화했던 음식물찌꺼기처리시설 설치가 기술검증없이 서둘러 실시한 결과 값비싼 기기가 쓰레기화됐던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의 우려를 짚어보자. 물부족해결의 하나의 열쇠는 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환경부의 물절약범국민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국민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주체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주체적인 참여는 운동의 계획,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해내는 것이다. 국민이 홍보, 교육, 실천의 대상으로 머물게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무슨 일을 해내기위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일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해 이미 160여개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체내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물질약대책은 누수방지 또는 절수기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물소비양식의 변혁을 보다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이 바로 그러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약범국민운동은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은 예고된 물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의 물부족종합대책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약범국민운동이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기를 기대해 본다.